

# “문턱 낮춰야 메기 출현” vs “재벌, 은행업 진출 우려”

## “인뱅” 대주주 요건완화 찬반논란

**정부·여당 ‘찬성’**  
“인뱅 뿐 아니라 ICT 진입도 막아”

**시민단체·금융노조 ‘반대’**  
“인뱅에만 ‘예외허용’ 이유 밝혀야”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고 추가 인가 역시 심사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외부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관행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토스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대주주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별법은 대주주 적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중 상향변경 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2015년	2019년
1-2. 자금조달 방안의 적정성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10	60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0	
4-1. 사업계획의 포용성	·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	100	120
5-1. 사업계획의 안정성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50	100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있을 것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 할 것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너무 엄격해 기존 인터넷은행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인터넷은행 진입장벽이 대주주적격성 때문에 너무 높으면 적격성 부분 완화도 고민해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추가 인가를 위한 평가방식 역시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안정성을 강조한데다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심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토스·키움 컨소시엄에 대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불허는 2015년 최초 인가심사에서 사용했던 주요 평가항목 배점을 올해 변경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며 “상향 변경된 항목의 면면을 보면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추가 조달과 사회적 금융 확대가 중요 평가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기술로 매일매일 치

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IT 현장에서 혁신성보다 포용성과 자본력이 강조되는 평가 방법이 적정한지 큰 의문”이라며 “일반 은행을 인가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인터넷은행은 사업 발전 가능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나섰지만 실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추곡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에 탈락한 키움·토스 컨소시엄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

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은행 역시 엄연한 은행인만큼 언젠가 은행산업 전반으로 규제완화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금산분리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에 이르기까지 현실 핑계로 원칙을 허무는 본말 전도의 개악”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인터넷은행법은 작년 10월 16일 법제화됐지만 일반 은행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개혁연대 측은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에 앞서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40년간 매년 3조 재정 추가지출”

### 》1면 ‘아이 한 명도 안 낳는...’서 계속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에는 12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원은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해결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단순히 인구 성장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노인, 여성 등 지속 가능 발전에 중요한 집단들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세워야

정부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발표했다.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대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단순히 출산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인구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녀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생활균형 여건 개선, 성평등 보장, 신혼부부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 지원과 노인 건강 보장성 강화, 중장년층과 노인 고용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구변화가 미칠 영향을 예측해 중장기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개인 특성, 지역, 산업, 사업체 등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가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인구변화 추위, 사회경제 파급효과 정도, 정책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재정정책도 대응 계획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지속 감소하고 2065년 까지 매년 2조 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인력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손욱 교수는 “업종별로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과 아닌 부문을 나눠 장기 노동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핀테크 등 4차산업 발달에 따라 산업별로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비중이 크게 병화할 가능성도 추가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철희 교수는 “노동조건 개선, 건강관리 투자 등을 통해 현재 청장년층부터 나이 들어도 건강과 생산성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도 필수요소다. 한양대학교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주거, 교통, 공공시설 등 전반적으로 고령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자 정신복지 프로그램을 전사회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 재정 안정성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서울 평균 휘발유값 ‘1624원’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1 당 1536.56원, 서울의 평균 휘발유값은 1624.82원으로 올해 들어 지방 휘발유 가격이 서울보다 더가 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통제부실 논란

**상근감사 ‘회계적 역량’에 의심 상주해야 할 감사 ‘검임’ 의혹도 이달 중순까지 거래정지 이어질 듯**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자에 오른 가운데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회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인이 비회계 전문가일뿐더러 회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는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회사 내부 감사의 역할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장부, 서류를 감사하고, 회사의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회사 및 자회사들의 모든 장부,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쉽게 말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는지 감시하

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적하는 역할이다.

감사 역할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기업의 감사인은 회계나 세무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다. 감사인을 고용한 코오롱티슈진도 사기총액 상위 5개 제약·바이오 기업 모두 국제형, 금융감독원, 금융권 출신의 감사인을 두고 있다.

그 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 11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그만큼 감사인의 회계적 역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상근 감사를 맡은 ‘Young J. Kim’은 회계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에 명시된 그의 역할은 ‘Statutory Auditor(회계 감사)’이지만 그의 주 전공은 전기공학이고, 박사 학위는 엔지니어링 경영으로 받았다.

아울러 회사에 상주해야 하는 ‘상근’ 감사임에도 검임 의혹이 나온다.

코오롱티슈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영 엔터프라이즈 시스템(Young Enterprise System, Inc.)’을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경영했다고 되어 있다. 회사의 주요 업무 영역은 시스템 개발·정보기술(IT)·텔레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미국 정부나 민간 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여전히 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의 명칭은 바뀌지 않은 상태다.

코오롱티슈진 감사보수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지난해 그가 받아간 감사 보수는 50만달러로 약 6억원 수준이다. 신라젠, 메디톡스, 에이치엘비 등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기업 5개사의 감사 평균 연봉은 2억1000만원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상장 이후 여러 부침을 겪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바 있고, 미쓰비시데이터 계약과 서버 라이선스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 반환을 놓고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손영미 기자 sonumji301@